

학생인권조례, 교사들과 뜨겁게 나누고픈 까닭

- 배경내(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실감이 나지 않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 마감일이었던 지난 5월 11일, 서명자 수가 법적 요건을 넘긴 것을 확인했을 때 불을 끄집어보았다. 3월말까지만 해도 완패를, 4월말까지는 석패를 예상했었는데 놀랍게도 4월말부터 서명자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더니 결국 역전에 성공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 인권의 기준을 확립하고 교육의 속살을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지난 15년 동안 '학생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울려 퍼졌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노무현 정부 아래서도 '학습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적 문구 하나가 초중등교육법에 삽입되는 것이 전부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학생인권은 후퇴의 연속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이른바 진보교육감들이 여럿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물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교육을 망친다느니, 학교를 정치의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느니 하는 보수의 맹공격 속에서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지난해 9월 도의회를 통과했다. 뒤이어 서울에서는 교육·인권단체들이 힘을 모아 주민발의 방식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됐다. 학교 현장의 구체적 변화를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과정이 인권의식을 성숙시키고 학교현장을 준비시키는 과정과 함께 가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말부터 시작된 조례제정 청구인 모집 서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돌이켜 보면 6개월이란 주어진 시간 동안 지금까지 주변부에 머물러왔던 '학생인권'이라는 의제에 대한 동의 서명을 8만2천 명(서울시민 유권자 1%)의 서명을 받아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의제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준비된 사람도 먼저 말을 걸고 서명을 호소하지 않으면 서명에 나서지 않는다, 조직력이 있다고 판단했던 단체들도 학생인권을 불편해하거나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서명을 모아내는 데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했다. 그 모든 장벽들을 뚫고 녹이며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역전의 기미는 서명 마감일을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의 진정어린 호소가 계속되고, 학생인권조례가 단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운명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서명인 수가 가파르게 늘기 시작했다. 4.27 재보선으로 서울 2개구에서 서명기한이 2주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주민발의는 불발에 그쳤을 것이다.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몇 십만 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동안 겨우 8만2천명의 찬성도 얻어내지 못한 진보'라는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소년들이 진보와 기성세대에게 냉소를 던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다. 다행히 그런 참담한 순간은 간신히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아직도 많은 장벽을 헤쳐나가야 한다. 가깝게는 서명 확인 과정에서 무효로 판단(중복 서명, 주민번호 오류 등)된 서명지가 1만부 가량 나오면서 닷새 안(6월 22일~26일 사이)에 다시 서명자를 모아야 할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학생인권조례를 부담스러워하고 교사를 궁지에 내모는 것으로 오해하는 교사들의 마음도 돌려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인권이나 고충을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학교 안에 인권의 가치가 바로 서야 학생도 교사도 존중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서울학생인권조례 서명

운동 과정에서도, 이미 조례가 통과된 경기 교육현장에서도 다수 교사들은 소극적 태도에 머무르고 있다. 학생이 미성숙하다거나 교사로서 위엄은 지켜져야 한다는 오랜 관념 때문인지, 수업을 방해하거나 동료들을 힘들게 만드는 학생들에 대한 난감함 때문인지 짐작하기 힘들다. 전자라면 학생관, 교육관을 바꿀 일이고, 후자라면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시스템을 바꾸고 학생에 대한 개별 지원을 늘려나갈 일이다. 현장의 준비됨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이야말로 현장을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는 말로 답하고 싶다(누군가에겐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학생의 입장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일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이 힘들어진다’는 막연한 생각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을 일이 아니다. 학생인권이 살아야 (교권이 아닌) 교사인권도 산다는 생각을 가진 교사들은 앞장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외치고 있다. 성숙한 방식으로 학생을 대할 때 학생이 더 성숙할 수 있고 구조적 해법을 내놓아야 학생과 교사와 충돌할 이유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8만5천명 서명을 받기 위해 85만명 가까운 사람에게 학생인권과 민주교육의 중요성을, 차별과 폭력 없는 교육을 바라는 열망을 건넸다. 그리고 조만간 학생들도 조금은 변화된 교육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교사든 누구든 곤경에 처한 사람의 처지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는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며 홀로 지기 어려운 책임은 나누어 맡을 줄 아는 시민의 역량을 길러나갈 거름으로 작용할 거라 믿는다.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교사들과 누구보다도 뜨겁게 나누고픈 까닭이다.